



□ 둘째, 지역고유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한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위하여 시·도가 주도하는 **지역혁신체제**를 가동한다.

○ 지방자치단체, 시민단체, 대학, 기업, 과학·산업기술 관련 기관 등이 참여하는 **지역혁신협의회**가 시·도별로 설치돼 시·도 발전계획과 **지역혁신체제 평가·개선방향** 등을 심의한다.

○ 아울러 지역혁신이 국가균형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**균형발전 지표**의 도입, **지역기업의 육성**, **지역고유문화 발굴** 등 다양한 균형발전시책을 새로 추진한다.

□ 셋째, 지역의 새로운 **혁신성장 거점**으로 **국가혁신클러스터**(법명 : 국가혁신융복합단지)를 조성한다.

○ 국가혁신클러스터는 지역에서 **혁신도시** 등 지역의 주요 발전거점과 주변 **산업단지·대학** 등을 연계하는 계획을 수립하면, 이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**지정**이 이루어진다.

○ 산업부는 국가혁신클러스터의 조성을 위해 불필요한 인프라 투자는 가급적 지양하고, 산업생태계 조성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중핵기업 유치를 위해 **보조금·세제·금융·규제특례·혁신프로젝트** 등 **5대 지원패키지**를 집중 제공할 계획이다.

【 국가혁신클러스터 5대 지원 패키지 】

|        |   |
|--------|---|
| 보조금    | • 설비·입지보조금 보조율 우대 적용  |
| 세제     | • 주요 혁신성장 거점 투자기업에 대해 세제지원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금융지원   | • R&D 사업화 자금의 저리융자 지원<br>• 모태펀드가 출자하는 신규펀드에 지방투자 의무비율 설정      |
| 규제특례   | • 국가혁신클러스터 입주에 필요한 인·허가의 신속처리 지원<br>• 투자선도지구 지정과 연계하여 입지규제 개선 |
| 혁신프로젝트 | • 국가혁신클러스터를 테스트베드로 하는 대표산업 실증프로젝트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|

□ 넷째, 시·도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면 부처가 해당 계획의 실행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**포괄지원협약제\***(법명: 지역발전투자협약)의 **추진 기반**을 마련했다.

○ 이번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부처와 협약을 맺으면, 부처가 협약이 실행될 수 있도록 **국비를 우선 지원**하도록 하는 등 **법적 미비점이 보완**됐기 때문이다.


□ **지역위 송재호 위원장**은 “이번 국가균형발전법 개정으로 참여정부 이후 추진동력을 상실한 **국가균형발전 추진체제**를 **발전적으로 복원**할 수 있는 **전기(轉機)**를 마련했다.”라고 말하고,

○ “앞으로 문재인정부의 국가균형발전 비전인 ‘**지역이 강한 나라, 균형잡힌 대한민국**’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**중앙과 지역, 그리고 국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**해야 한다.”라고 강조했다.

□ **산업부 박순교 장관**은 이날 “이번 국가균형발전법 개정이 전국이 **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** 건설의 **주춧돌**이 될 수 있게 하겠다.”라고 말하며, 차질 없는 후속조치 이행을 약속했다.

□ 산업부와 지역위는 **시행령 개정**을 7월까지 **완료**하고, 법령 개정취지를 반영한 **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**(‘18~’22)을 **10월에 수립·발표**할 예정이다.

○ 또한, 국가혁신클러스터의 조속한 조성을 위하여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을 위한 **수립지침 마련**, 중핵기업 유치를 위한 **기업유치지원단 출범식** 등 제반 준비작업도 **상반기 중에 마무리** 짓는다는 계획이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총괄과 변재택 사무관(☎ 044-203-4419), 지역발전위원회 조현정 전문관(☎ 02-2100-1160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